

‘로드킬’ 한해 2215건...대책 추진

동물 찾길사고(로드킬) 원인 진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앱을 활용한 사고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찾길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물 찾길사고는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1884건 등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2215건이 발생했다. 일반국도에선 2012년 3174건에서 지난해 1만5436건으로 5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관련업계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물 찾길사고 지침’ 28일부터 시행 사고조사 ‘도로관리기관’으로 일원화 위치정보 기반 앱 활용 사고예방 DB化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물 찾길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로 기록하던 방식 대신 녹색연합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앱 ‘굿로드(Good Road)’를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2500여명의 도로 유지·보수원들은 찾길사고를 당한 동물을 발견하면 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찾길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 기록돼 야생동물의 종류, 분류군, 행정구역, 도로유형, 도로관리기관

등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생태원은 동물 찾길사고 다발구간과 원인을 분석하고 사체 폐기 및 이관 등 절차를 밟는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제공돼 운전자의 동물찾길사고 예방을 돕게 된다.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집중 발생구간에 대

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물찾길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누리집을 개설해 통계정보는 물론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정보를 제공한다. 고라니 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과 11월 등엔 집중예보제도 이뤄진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와 함께 동물 찾길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운전자 안전 운전 수칙 및 동물 찾길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환경부와 국토부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지침이 사람과 동물을 모두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청정해역에 혼합잡질 버린 어민 3명 입건

여수시 가막만 해역에 혼합양식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어민들이 해역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혼합양식장의 폐류잡질 등 잔류물을 어장관리선에 싣고 바다로 나가 몰래 버린 문 모(59) 씨 등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신적 어장관리선 B 호(4.97t) 선장 문모 씨와 C 호(4.81t) 선장 김 모(66) 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여수시 소호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전날 작업한 혼합 폐각 및 잔류물 각 100kg과 200kg을 무단으로 해상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장관리선 J 호(3.30t) 선장 서 모(56)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 선착장 앞 해상에서 전날 작업한 혼합 폐각 및 잔류물 103kg을 무단으로 해상에 투기하다 여수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기업형 성매매 업소 업주 등 5명 구속

광주경찰청은 오피스텔 등 대형 빌딩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와 이른바 바지사장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빌딩 등지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9만~15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기간 1만7000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 수입액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에 6대의 CCTV를 설치하는가 하면 업소 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한 뒤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복 등 이벤트 복장과 가면 등이 단속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음성적으로 번지는 대규모·기업형 성매매 업소와 신·변종업소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엄정조사 및 성매매를 통한 부정수익 등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우 기자

영업종료 상가 침입 23차례 절도 40대 구속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상가에 들어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8분께 광주 남구 임림동 B(4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 10만 원을 훔치는 등 광주 곳곳에서 23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식당 주인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해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특별한 주거 없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보했으며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출소 이후 수개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점을 토대로 여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애견 문제 말다툼 중 아내 살해 3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A(3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에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1)씨와 애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복부 등을 흉기로 4~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아내 B씨가 키우는 애견에 욕을 한 것에 말다툼을 시작해 우발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서은홍 기자



법정행하는 MB ‘뇌물수수’와 ‘형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두레농산, 밋나간 운영 ‘문제’

농업회사법인이 모기업 재산증식에 악용돼

2006년 설립된 지역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모기업의 재산증식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모아주택산업의 자회사로 알려진 한두레농산(주)은 2006년 수완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로 인허가 되었다.

이후 국비 17억과 시·구비 13억, 자부담 120억원 등을 투자해 건립한 한두레농산(주)은 대도시권에서는 처음으로 기존의 유통단체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공급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제가 제기된 한두레농산(주)은 토지매입 당시 농업회사법인이란 점을 앞세워 취득세 50%를 감면 받은 후 부원유통을 설립해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설립하고 해당 부지의 지목을 주유소로 변경하여 한두레농산(주) 설립 당시 감면받은 조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주무 해당 관청인 광산구청은 매년 농업회사법인인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한두레농산(주) 설립 이후

정상적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립 위반에 따른 보조금 신청위반과 사후관리 미이행 및 목적사업 위반에 의한 보조금 회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음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두레농산(주)은 이에 고치지 않고 2007년부터 모기업인 (주)모아주택산업이 추진 중이던 전남 곡성군 옥과면 소재의 골프장 사업 부지를 2013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한두레농산의 토지 매입은 비업무용 명의신탁 토지 취득으로 토지의 매각조치와 취득세 감면 등의 추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 여성 대상

범죄 매년 2300건 넘어

경찰, 오는 8월까지 집중 단속

2015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2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여성 대상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2369건, 2016년 2484건, 지난해 237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2016년 60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16건(26%)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커·불법 촬영 등이다.

전남경찰은 다음달 15일까지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위원을 포함한 민·관 실태조사단을 각 시별·군·구 구성, 범죄 수사과정에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및 소극 대응 등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또 지자체와 협력, 이날부터 한달간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 일제 점검을 펼친다.

김정환 기자

